

'97년 대선과 지식인의 자화상

강 정 구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 지향과 유기적으로 접목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조망하는 장기적 구도를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거시적 선택이야말로 민족사의 주체로서 부여된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역사적 책무는 대학생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지식인에게 더욱 적용되는 문제이다.

1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나는 우리들 지식인에 대한 자화상을 제대로 음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여기에 그리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에 대한 자화상은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는 우리 지식인이 대선을 치른 지 오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성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글이다. 선거과정에서 관찰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식인의 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성찰의 소재를 제시해 보겠다. 필자는 대선 직전 젊은 대학

생에게 '97년 대통령선거에 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지침을 제안한 바가 있다. 바로 이 지침은 대학생들에게 국한되었다기보다 보편적인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지식인, 특히 교수님들의 자기 성찰에 대한 하나의 준거틀로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첫째, 선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은 예측한 대로 대학교수들은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고, 그 투표유형도 역시 기득권

의 현재 이해관계에 따르는 성향과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평소에 서명운동 등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수들을 상대로 모의투표를 한 경우에도 여권후보를 선호한 비중이 60~70%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모의투표 이전의 논의과정에서는 이 여권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이다. 모의투표에서야 속마음을 비치는 이러한 여권지향의 투표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무척 곤혹스럽다. 필자 주위의 교수들도 역시 여권후보 지향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면 자신이 여권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권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들은 대체로 자기의 지지후보를 분명하게 밝히고, 지지 사유를 나름대로 당당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교수들은 평소에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잘 밝히고 떳떳하게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평소의 자기 성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여권후보 지향 교수들의 행위유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우선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않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여기에는 친민자본주의성, 권력 뿌리의 친일성 등 반민족이나 탈민족성, 군부독재와 결합한 반민주성, 민중배제성, 극단적인 반공제일주의 등으로 얼룩진 핵심 기득권 집단과 이들 지배블럭에 공생해온 일반 기득권 층이라는 부정적 특성화가 계급적 투표행위의 감추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누가 싫어서 결국은 여권후보에게 찍을 수밖에 없

다는 식의 궁색한 자기 변명으로 자신의 계급적 선택을 미화하는 진술하지 못한 행위는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된다.

둘째, 병역문제의 희석화를 들 수 있겠다. 여권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자, 일부 여권지향의 교수들 사이에 납득하기 힘든 역설로 이 문제를 희석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았다. 국회의원 등 정치가, 재벌, 특권층 등의 경우 고의건 아니건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는 점을 언론이 보여주자 이 사람들도 이러한데 여권후보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논리로 병역기피 의혹의 문제점을 대수롭지않은 것으로 희석하였다. 이들도 또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동병상련'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략적인 정치관의 희석화 책략을 그대로 복사하는 논리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특권층이 예사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우리 지식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 병역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권후보를 지지한다면, 먼저 병역기피 의혹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비록 이러한 도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도덕성 실추의 문제가 대통령 선택의 기준에서 핵심적이거나 중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자기는 여권후보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한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지식인다운 자세라고 여겨진다. 그런데도 최소한 공유되는 기준조차 애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합리화'시키는 행위는 사회 전반의 통약성

(commensurability)마저 거부하는 행위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셋째, TV 합동토론에 대한 평가에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토론에 참가한 세 후보들은 모두 상당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번째 토론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있을지라도 토론을 이끌어 가는 기술적 수준은 모두들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였다. 부분적으로 막무가내식 대답, 회피성 답변, 두루뭉실 넘기기 답변 등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적시에 상대방의 허점을 파헤치면서 자신의 정책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적극적인 토론의 모습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러한데도 토론의 평가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점에서 돋보이고 다른 후보를 능가하였다는 속내용에 대한 주장보다는 젊은 후보가 '당돌하게' 또는 '저돌적으로' '물고 늘어졌다'는 식의 형식을 주로 문제삼으면서 객관적인 토론 평가 자체를 배제하는 주장들을 일삼았다. 당돌하다는 평가는 적극적인 토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토론에 활기를 넘치게 하는 생동감 있는 토론 자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극적인 학문 토론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평소에 자주 주장하는 교수님들께서 왜 하필이면 대선 토론에서는 점잖은(다른 말로는 무기력한) 토론형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세간에서 유포되었던 '아무개를 찍으면 아무개가 당선되니까'라는 식의 책략이 곧 바로 교수님들의 대선 토론 평가에 영향을 끼쳐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다보니 제3후보에 무리하게 흠집을 내어 평가의 객관성을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다음은 단선적인 '거짓말' 논쟁이

다. 거짓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도덕성에 대한 침해라는 반윤리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가 과연 우리의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도덕성을 짓밟은 새빨간 '거짓말'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본인의 주장처럼 약속 불이행이고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보니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교수들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거짓말'이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중에 유포된 흑색선전과 꼭 같이 특정후보를 마치 시중의 파렴치범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는 원천적 자격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 같은 최후의 심판을 쉽게 내린다. 글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의 선택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도덕성의 원천적 상실로 볼 수 있을지, 또 비록 도덕성의 부분적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훼손이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선택기준에서 그렇게 중요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대통령 선택의 기준에서 설사 도덕성 훼손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준을 능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덕적 순결주의가 중요하지만, 이를 결정적인 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정치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라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도덕적 순결주의보다는 일부 지역이나 집단에 확고한 '아무개 무조건 배제론'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이 매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덕적 순결주의로 걸포장하는 위장술로 거짓말 논쟁을 끌어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그 신물나는 연고주의의 대표격인 학연이 또 다시 맹위를 떨친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학연과 지연이 함께 어울려 고질적인 패거리 정치문화를 창출하여 공공의 이익보다 소집단인 패거리의 이익과 패권이 더 맹위를 떨치는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다. TK, PK, KS, SK 등은 지연과 고등학교라는 학연이 겹치기 사돈을 맺어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 봉건적 국정농단을 자행한 김현철의 경우 역시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군맥과 금맥을 은밀히 형성한 점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 패거리들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사회에서도 무슨 보직 선거만 있으면 고등학교 동창 패거리, 대학 동창 패거리 등이 뭉치고, 이끌어주고, 설치고 하는 모습들을 수시로 목격한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그 엘리트 의식으로 휘감은 KS가 동창회 회보에 특정후보의 특집을 내어 기승을 부렸다는 보도를 보고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비아냥거렸다. 평소 이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패거리 짓거리를 자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 이번 대선에서 이들에게 커다란 날개를 달아준다면, 그 학연에 따른 피해는 기존의 TK나 PK의 세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하다는 인식을 유감스럽게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지식인이라면 이러한 패거리의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이해관계에 터하여 사물을 판단해야 하는데도 실상은 오히려 이들 지식인이 더 패거리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이름이 잘 알려진 학교 출신일수

록 선민의식, 특권의식, 패거리의식에 더 오염되었음을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지극히 우연에 불과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학연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지식인이 어떻게 뗏뗏이 학생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유(악)명 브랜드 학교 출신이 아닌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을 필자는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자칫 잘못했으면 매머드 TK나 PK가 재생될 뻔했으니까 말이다.

여섯째, 수궁하기 힘든 극단적인 급진주의 논리가 비록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식인이나 학생들 사이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수구적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경우 '98년 중·하반기에 예상되는 대규모의 노동자 해고, 수구적인 노동정책과 경제정책 및 만연할 지역허무주의 때문에 민중저항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역사행로가 바람직한 것인지 쉽게 동의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 마치 극대화 경합을 벌이는 듯하다. '80년대 일부 지식인의 좌익 소아병적이고 교조적 급진주의 유제를 간직한 채 아직도 허황된 꿈 속에 사는 듯한 이들에게 오히려 연민의 정까지 느낀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성향을 단지 주위의 지식인에게서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학생이나 민중운동 진영 속에서도 목격하였다.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5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 또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5천년 만에 민이 주체가 된 정권교체에 아무런 역사적 의미를 두지 않고(물론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과제로 설

정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권이 당선된 것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젊은이도 많이 있다. 이제 제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하소서.

일곱째, 탈지역주의나 정권교체 환원론적으로 DJP 연합을 미화 내지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DJP 연합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공동집권을 목표로, 권력 나눠먹기와 내각제 개헌을 합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책연합이나, 정략적 야합이나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자신은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정권교체라는 큰일을 위해서 내각제를 수용하였다는 점을 당시 김대중 후보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공조나 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료직을 50 대 50으로 나누고 내각제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책연합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굳이 정책연합을 강변하는 논리를 피력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야합성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라는 명분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폼여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김종필씨와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연합'한 점을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역사의 진보라고까지 항변하는 일부의 논의도 있었다. 아무리 지역주의가 망국적인 것으로서 청산의 핵심적 대상이라 하더라도 김종필씨에게 진보 운운하는 것은 진보를 탈지역주의에 일원적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논리로, 곡학아세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것 같다. 학문이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저 높은 곳에서 도도하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학문신비주의를 배격

해야겠지만, 학문이 세속의 권력에 영합하고 자신의 이름 내세우기를 위하여 수시로 그 기조나 색깔을 바꾸는 학문비속주의를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 대선을 계기로 확인하였다.

여덟째, 지식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곡예를 멈춰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지난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던 어떤 대학교수가 내건 출마의 변은 필자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 분은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어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정 그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만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또 이 때문에 출마하려 한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누구처럼 대통령 자체가 되고 싶어 출마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최소한 백척간두와 같은 위기라는 구실은 둘러대지 않았어야만 옳았다. 그야말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인 유신시절이나 6월항쟁 당시 4·13 호헌조치 철회 등 대학교수 서명운동 때에 그는 대학교수로서 서명에 한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자기의 변대로 나라를 생각하는 구국의 충정이 충만한 지식인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교수가 되고 난 이후 군부독재의 암흑세계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교수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들 지식인의 자화상 속에서 자기 주소 또는 정체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7가지 종류의 지식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학문적 지향이나 신념일량 제대로 가지지도 못한 채 권력과 돈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나 취향에 맞추어

주는, 곧 해바라기처럼 양지를 따라 다니는 관변 지식인; 자기 일신의 세속적인 영달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기존 지향이나 신념을 내팽개치고 전향해버리는 변절 지식인; 아주 협소한 전문분야에만 매몰되어 자기 영역 밖의 거대구조인 인간사회·역사 등의 영역에는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하는 쟁이 지식인; 어떤 집단이나 계급에 귀속되지 않고 비당파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유롭게 부유하는, 그래서 합리적·객관적·중립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만하임적인 떠도는 지식인; 또 지식 그 자체를 위하는 지식매물적 지식인; 계급이나 집단의 지배권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유기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계급이나 집단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일체화 해가는 유기적 지식인; 또 인간해방과 역사의 진보를 위한 비판적 자세를 갖추고 현실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개조를 위하여 실천활동을 맹렬히 전개하는 비판적 지식인 등일 것이다.

진정 구국의 심정으로 출마라는 결단을 내리는 지식인의 경우, 그는 최소한 유기적 지식인이나 비판적 지식인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이 '좁은 눈'에는 유기적이거나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평소의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기회에 자신의 자리 매김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은 언행을 접목시킴으로써, 때로는 비판적 지식인에서 관변 지식인으로 또 쟁이 지식인으로 카멜레온처럼 표변하는 지식인 상을 불식시킴으로써, 세간에 확산된 지식무용론을 잠재우는 일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심히 마음이 조급하다.

아홉째, 서울대학은 최근 교수의 논문표

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규범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한다. 아마도 신한국당 경선 때부터 일부 권력지향적 교수들의 노골적인 줄서기가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수백 명의 교수들이 1번에서 4번까지의 대통령후보 진영에 합류하였다(필자 또한 공개적으로 특정후보에 합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어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들을 빼놓고는 그들 대부분은 이 대선캠프 합류를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몇몇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필자는 지식인, 특히 지성인의 경우 자신의 신념과 학문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권이나 사회집단 등과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유기적 지식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실천지향적 학문을 추구하는 것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평소 자신의 학문적 기조와 상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권력, 돈,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기존 신념일랑 아랑곳하지 않고 합류해버리거나 합류하기를 갈구하는 변절적 지식인이 으레 선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나타나곤 한다. 우리는 아예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적 기조나 신념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부류들이 학교에서 보직만 맡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일부의 보직 전념 교수들이 학교공동체의 물을 흐리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바라기처럼 권력의 양지를 따라 쫓아 다니는 관변 지식인이 평소에는 정권안보를 위하여 유신헌법, 공화당 창당, 국보위, 안기부 등에 비밀리에 참여하

다가 선거 때만 되면 무슨 무슨 캠프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이제 진정한 문민정부가 수립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이러한 합류를 숨길 것이 아니라 뚝뚝하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된 것 같다. 지식인이 모순 투성이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을 지원하고 모순된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자신의 학문 지향, 실천지향, 정책지향, 정당선호 등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지식인이 대선 캠프에 당당하게 합류하여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과도한 정치활동'이라는 식의 서울대학교의 염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이상 대선과 관련된 지식인의 자화상을 선택적으로 또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이제 필자가 선거 직전 대학생들에게 거시적인 민족사적 안목과 구체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던 바, 이 지침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학생을 그래도 어느 특정 집단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보았고 또 우리의 민족사적 전통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지침은 우리들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에게 더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선 오늘의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족사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앞서야 한다.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과제들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 성취; 정치민주주의 차원을 뛰어넘어 일상생활 영역으로의 민주주의 확산, 제도화, 공고화;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실현; 국가 수준의 부도를 내게 한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경제체계의 전면적 해체와 재구조화; 박정희 독재에서 비롯된 망국적인 지역주의 근절; 지구촌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의 계승·발전 및 지구촌 문화와의 접목; 생산 만능주의의 극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주의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유기적 접목; 맹목적 근대화론 초래된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 등일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각 후보나 정당 정책이 위의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합리적인 대응 정책인지, 이 정책들이 단순히 선거용인지, 이를 수행할 권력기반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를 권력 행사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후보자나 그 주위의 핵심세력이 가지고 있는지, 또 과거의 민족사적 과제들(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 민중의 권익을 위한 노력 등)을 위하여 방관과 냉소로 일관하였는지, 아니면 열심히 실천운동에 종사하였는지, 이도 아니면 군부독재의 하수인이나 공범자, 민중탄압의 주범, 반통일의 선봉장, 지역주의의 원흉이었던지를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각 영역에 대하여 각 후보별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평가에는 각기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보다 중시하는 영역

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는 전략적 선택에 의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 점수화된 평가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특정한 요인이 없다면 이 기준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투표 행위에는 꼭 이 기본 자료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선택은 21세기의 민족사적 핵심과제를 무엇이라고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민중의 정치세력화, 생태주의와 인본주의의 결합, 재벌해체를 통한 경제구조의 전면적 재편, '우리가 남이냐' 식의 지역주의, 박정희와 5·6공을 꿈꾸는 군부독재의 재등장 등이 민족사적 핵심과제이고 이들이 선택기준의 결정적 관건이라고 각기 설정할 경우 민중당, 녹색당, 통일당, 재벌해체당, 지역주의확산당, 5·6공재건당, 박정희향수병당 등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사적 핵심과제로 설정한 각 영역이 과연 장기적인 민족사의 구도 아래에서 핵심과제가 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것이냐 하는 점과 또 이 하나의 핵심과제가 다른 과제를 압도할 정도로 절대적인 관건인가 하는 데 있다. 아마도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중의 정치세력화', '박정희 군부독재의 재귀', '우리가 남이냐 식의 지역주의'를 민족사적 핵심과제로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 지향과 유기적으로 접목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조망하는 장기적 구도를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거시적 선택이야말로 민족사의 주체로서 부여

된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역사적 책무 또한 대학생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지식인에게 더 적용되는 것일 테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대선에 임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행위에 대하여 곰곰이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해볼 때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지식인인지, 우리 사회나 민족사가 요구하는 지식인은 어떤 종류의 지식인이고, 지금 현재의 나의 자리 매김은 이에 얼마나 걸맞은지, 혹시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거품이 아닌지, 우리가 가르치는 젊은 대학생에게 얼마나 떳떳한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요즘 IMF 처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맹신주의, 새 대통령에 대한 찬사로 일관된 한국 언론의 표면주의, 세계화에 대한 무저항주의, 김영삼 정권의 모든 정책을(금융실명제까지도) 매도하는 무조건 죽이기주의,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미주의나 숭미주의,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처방전에 무조건 박수를 보낼 것을 '강요'하는 획일주의 등에 대하여 의연히 맞서는 비판적 사회참여자로서의 지식인의 위상을 되찾고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강정구/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통일시대의 북한학』,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좌절된 사회혁명』 등이 있다.